

地域開發學科의 성격과 발전방향

宋 仁 城

(全南大 地域開發學科)

1. 沿 革

1960년대 후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의 정치 신앙이 되었을 때, 그 수단으로서 수많은 개발 활동이 도입되고 구체화되었다. 정부가 총량적인 측면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많은 지역문제들을 야기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역간의 격차, 대도시의 과밀, 농어촌 지역의 過疏, 환경 그리고 한정된 자원과 재원의 불합리한 이용상의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문제들은 기존의 학문적인 접근방법으로는 개선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대부분 이들 문제에 대하여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접근이 됨으로써 한 문제의 해결 자체가 다른 문제의 출발이 되고 말았다. 즉, 지나친 학문영역의 전문화는 일반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러한 욕구는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부터 강하게 표출되었는 바, 1960년대 후반 전남대에서 지역개발학과 개설을 문교부에 신청했으나 학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시 문교부는 대신 연구소 설립을 제안하게 되어 지역개발연구소가 대학내에 설립되게 되었다.

그 뒤 1975년 드디어 전남대 상과대학(현 경영대학)에 지역개발학과가 신설되면서 단국대,

영남대, 청주대, 중앙대, 한남대, 목포대, 강릉대, 대구대(지역사회개발학과), 성결교신학대, 경원대, 경기대 등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학부의 학과 외에 한남대를 비롯한 특수대학원 등에 지역개발학과가 신설되고 있다.

이러한 학과를 바탕으로 학과 관련 연구활동의 체계적인 심화를 위하여 1988년에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연구소가 거의 전국 각 시·도의 대학교에 설립되어 연구와 실제를 통합해 가고 있다.

2. 學科의 性格

지역개발학과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空間問題, 즉 도시 및 지역문제와 환경문제를 개선·해결하기 위한 종합이론을 습득하고 나아가 공간문제들의 해소를 위한 현대적인 분석 및 계획기법을 습득하여 이론과 실제를 종합한 유능한 계획인(planner)과 공간경영인(spatial manager)을 양성하고 있다.

공간(도시 및 지역)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복합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개선과 해결에 대한 접근방법 또한 여러 가

지 기초과학에 근거를 둔 綜合科學이다. 즉,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든 사회에 관한 사회학, 사회의 틀을 수용하는 물리적인 땅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지리학, 도시계획과 지역계획, 사람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의 입지나 규모에 경제적인 기반을 제시하는 경제학 이론(지역경제학, 산업입지론), 이들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갖고 운영되게 하는 주체조직과 제도에 관한 행·제정학 이론(정책결정·행정조직·발전행정·지방행정 및 지방제정), 모든 접근방법에 있어서 환경요소(environmental factors)를 고려하게 하는 환경계획 그리고 보조적인 기초학문 등의 종합과학이다. 지역개발학과에서 다루는 주된 學問 領域은 다음과 같으나, 각 학과가 입지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은 다르다.

첫째, 계획철학의 확립과 계획기법의 숙달인바, 누구를 위해, 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반을 확립시키는 것으로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둘째, 공간의 각종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인바,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 그 이유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셋째,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개선·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함양하는바, 공간문제를 개선·해결하여 해당공간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적 기반구조 및 사회개발방안과 정책을 연구한다.

넷째, 개발과 성장과정에서 수반되는 한정된 각종 자원의 관리와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학과의 교과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공·사 부분의 관계없이 일반계획가, 도시 및 지역계획가 그리고 공간의 성장관리의 공간경영자(spatial manager)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3. 教科課程

전국의 각 대학이 각각의 교육목표를 달성하

〈표 1〉 지역개발학과 주요 교과과정

8개 대학 중 설치대학	교 과 명	비 고
8개 대학	지역개발론 도시계획론 지역경제학 계획법 행정학(개론)	도시계획개론 5개 토지공법, 부동산 관계
7개 대학	주택정책론 농촌개발(계획)론	주택론 2개 포함
6개 대학	지역통계분석 교통계획(정책)론 도시경제론 지역(개발)정책 지역사회개발론 지역계획론 토지이용계획론 환경계획론 경제이론	지역통계학, 사회통 계학 환경정책론
5개 대학	계획이론 도시설계론 민법중칙 지방재정학 거시경제학 도시경제론 부동산학개론 조사방법론	
4개 대학	지방행정학	
3개 대학	도시정책론 지역계획연습 산업입지론 지역분석기법 지역조사연습 지역사회학 경제지리	
2개 대학	도시(농촌)사회학 단지계획 자원론 지역개발과 사회정책 정보체계론 공공경제론 도시개발론 지역사회조직론 지역계획원장 공간구조론 토지정책 행정법 지역개발행정 한국경제론 국제개발론	

기 위하여 특성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92년 11월 현재 전국의 8개대(단국대·전남대·중앙대·영남대·한남대·청주대·목포대·경원대)의 지역개발학과 교과과정을 종합 정리한 것이 앞의 <표 1>에 나타나 있다.

총 147개의 학과목이 8개 대학에 나열되어 있다. 물론 유사한 과목명도 있지만, 대단히 많은 과목 나열이다. 이 중 8개 대학에 모두 개설된 과목은 지역개발론, 도시계획(이)론, 지역경제학, 계획법(토지공법 등 부동산관련 법규), 행정학(학론) 등 5개이다. 7개 대학에 설치된 과목은 주택(정책)론, 농촌개발(계획)론, 교통계획(정책)론, 지역통계분석 등이며, 6개 대학의 개설과목은 미시경제이론, 지역(개발)정책, 지역사회개발론, 지역계획론, 환경계획론, 토지이용계획론, 경제원론 등이다. 5개 대학에 개설된 과목은 계획이론, 도시설계론, 민법총칙, 지방재정학, 거시경제학, 도시경제론, 부동산개론, 조사방법론 등이다.

이와 같이 개설 빈도수가 높은 과목들은 대개 도시 및 지역계획과 이를 위한 기초 및 보조 과목, 도시 및 지역계획의 구체적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반수 대학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을 보면, 도시 및 지역계획 등의 보조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며, 빈도가 1회씩 나타나는 과목도 약 55개가 되는데 이 과목들은 대부분 그 대학의 학교내 소속과 대학이 입지한 地域의 特性에 따라 추가된 과목이라 볼 수 있다.

1986년 조사한 지역개발학과 교과목 현황을 보면 10개 대학으로 2개 대학이 더 많아 총 333개 과목이었으나, 현재 147개로 줄어든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學科의 方向 定立으로 볼 수 있다. 즉, 한 학과당 평균 과목수가 34개였으나, 이번 조사의 경우 겨우 18개 과목으로 대폭 줄어들고 체계가 잡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설 빈도수가 높은 과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 것을 보면 地域開發學의 핵심적 내용이 정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시 및 지역계획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교육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綜合性을 제고할 과목이 개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과과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

다.

첫째로 아직도 교과목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둘째로 전공의 독자성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셋째로 교과목에 대한 학문적 영역이 불분명하고, 넷째로 교과목의 필수, 선택 그리고 이수 순서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이다.

4. 學科運營의 問題點

지난 15년 동안 학과의 교과과정은 차츰 그 틀을 잡아가고 있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화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대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學科에 대한 학문분야 내에서의 그리고 사회에서의 認識이 대단히 미미하거나 잘못되어 있다. 우리 학문분야에서는 학문분류를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등으로 이분하는 경향이 있고 지역개발학과는 이 중 꼭 어느 곳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분야를 종합하는 입장에 있고 각 학과의 출발과 교육의 중점목표에 따라 인문사회계 또는 이공계에 가까운 경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인식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만 교육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로는 일반기업에서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계획력,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조사·분석 능력, 특히 토지(공간)의 개념을 도입한 경영·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 특히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계획 분야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종합적으로 공간경영·관리·계획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및 도시계획의 기사 및 기술사가 되어 스스로 이 분야 용역업을 담당할 수도 있다.

둘째, 현재의 學科名稱을 교과과정과 일치되고 학과성격에 대한 일반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변경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15년 동안의 역사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도 있다. 제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름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이고 이외에 환경계획학과, 계획학과, 공간계획학과, 도시계획학과 등이 거

명되고 있다.

셋째, 수여하는學位 명칭이 서로 다르고 所屬대학도 꽤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학문적인 자율성 내지 독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졸업생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혼란이 크다. 현재 학부 졸업생에게는 문학사·경제학사 또는 행정학사를 많이 수여하고 있다. 석사는 도시계획석사·경제학석사·행정학석사, 박사는 경제학박사나 행정학박사 등을 수여하고 있고, 소속대학도 법정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산업대, 경상대 등으로 다양하다. 지금의 각 학과가 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실정 때문에 동일한 소속대학을 갖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졸업생의 進路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개발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개발학과 졸업생의 중요한 수요처인 공무원사회는 전문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재도가 뒤따르지 못하여 이 분야 졸업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단히 인색하다. 일반기업체는 기존의 학문명칭과 대학에 대한 인식에만 연연하고 있어 균등한 응시의 기회마저 차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지역개발학과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5. 教育의 發展方向

이미 학과 운영의 과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결하는 데 학과 교육개선의 최우선 목표를 두도록 한다.

첫째, 학과의 教育目標를 좀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간문제(도시 및 지역계획 문제)의 현상과 미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도시 및 지역)계획가를 양성하며, 한정된 공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공간관리자(경영자)의 능력을 갖추게 하고 또한 일반적인 기획능력을 획득하게 한다. 즉, 綜合計劃家(general planner)의 능력을 갖도록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분야이다.

둘째, 이렇게 정립된 교육목표 아래 標準敎科課程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과정 전체를 확

일화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교과목은 전국의 지역개발학과에서 개설토록 하여 학문의 연대성을 확인하고 인식시키도록 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학원론, 행정학개론, 지역개발론, 도시계획론, 지역계획론, 미시경제학, 지역경제학, 계획법(토지공법, 부동산관련법), 계획이론, 지역사회개발론, 지역통계분석, 조사방법론, 디넵총칙, 토지이용계획론, 지방재정론, 부동산학개론, 주택정책론, 농촌개발(계획)론, 교통계획(정책)론, 환경계획론, 도시설계론, 거시경제론, 도시경제론 등과 도시계획연습, 지역계획연습, 지역개발연습 등이다. 이들 과목을 포함한 각 大學의 特性을 살릴 수 있는 과목들을 추가하여 일반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초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조화시킨다. 가능하면 너무 많은 과목을 나열하지 않고 각 과목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며 교육방법도 실습, 세미나, 토론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도입함은 물론 평가의 방법도 창의성을 재고할 수 있는 논문, 구술시험 등의 방안을 이용하도록 한다.

셋째, 學科 이름과學位 명칭을 따른 시일 내에 새롭게 統一하도록 한다. 지역개발학과의 실제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과이름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의 가장 빈도 높게 거론되고 또한 국제적인 學問의 脈이 연계되는 이름이다. 학위명칭도 현재의 문학사, 경제학사 또는 행정학사보다는 학과 교육내용에 알맞은 새로운 명칭이 교육법시행령에 추가되어 통일된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계획학사'가 가장 선호되고, 다음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학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학과명칭이나 학위명칭의 변경 등은 관련학과 구성원의 깊은 토의와 합의 아래 이론적인 뒷받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졸업생의 進路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의 인식과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개발학과의 졸업생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곳은 ① 공무원, ② 公·私 기업체, ③ 용역업체, ④ 교육 및 연구기관, ⑤ 자영 등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전문화가 요구되며 그 중에서도 도시 및 지

역계획 분야의 전문화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고 공무원사회에서도 이미 인식된 사항인데 이 분야를 전공한 대학 출신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직제에 ‘도시 및 지역계획’ 職群 또는 職列을 신설하여 도시계획과 출신, 지역개발학과 출신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사 기업체에 진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졸업생들이 기업의 기획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충실히 하고 이러한 학문의 성격을 공·사 기업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련된 용역업체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및 도시계획기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역 및 도시계획기사 외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자격증을 갖고 일정기간 훈련을 쌓으면 스스로 용역업체를 세울 수도 있다. 많지는 않지만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전국의 각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지역발전(개발)연구원(소) 등에도 많은 인력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새롭게 행정 및 지방의회에 전문인으로서의 수요도 차츰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인식의 결여로 진로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호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地方化가 정착되면 졸업생들의 수요창출은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

6. 맺음말

우리나라의 학문영역에 地域開發學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가치를 내건 지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2, 3년이 지나면 成年이 되는

연분이 쌓였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과 자체의 양적인 팽창은 물론 질적인 발전 또한 괄목할 만하다. 국내외에서 이 분야를 전공한 훌륭한 학자들이 전국의 각 대학교에 포진 하면서 학과의 발전에 열성을 기울인 결과 학문의 틀이 꽤 잡혔다. 그러나 이 학문을 수용할 사회의 변화속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 졸업생들의 진로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잡혀져가는 학문의 틀과 시대의 변화는 ‘개발’이라는 문기가 있는 학과명칭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 교과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내세우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며 국제적인 맥을 연결할 수 있는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과명칭의 개선과 더불어 수여되는 학위의 명칭을 통일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이론과 실기를 잘 연마시키던 1993년부터 더욱 건설해질 지방자치시대의 도입·정착과 더불어 졸업생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産·學·研·官의 실질적인 연계체계가 확립되며 학문은 차츰 靑年期的 활발성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이 되면, 통일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 북한지역의 도시 및 지역문제를 개선하는데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대거 필요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參考文獻>

- 김영모, “외국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1986.
 김영모 외, “지역개발학과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학회, 『국토계획』, 제22권 1호, 1987, pp. 219~229.
 박서호, “국내의 지역개발학과 교과과정”, 1986.
 송인성, “학사행정과 졸업생 사회진출”, 1986.
 하성규,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성격”, 1986.